

연구모임 정책건의 보고서

연구모임명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0. 31		
대표자 소속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성명	전구슬
참여자 성명	전구슬, 민은주, 손유란, 최인화, 김수정		

1. 연구모임 구성 배경 및 활동 목표

- 1) 부산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부터 3년간 연평균 농도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음. 부산은 여름철에도 남동풍의 영향으로 자체 배출원인 선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부산시민들은 만성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 현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수도권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활동을 통해서 부산시 맞춤형 정책을 제안 할 필요성이 있음.
- 3) 또한, 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있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교육과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하였음.

2.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활동

- 7월부터 10월까지 총 9차례 연구모임을 가졌음. (1차례 기자회견 및 간담회, 4차례 정기회의, 4차례 연속강좌)
- 1) 제 1차 모임 (7/3)
 - 지난 6월 21일, 감사원에서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부산시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내역은 597개 사업장에서 18,918건의 성적서 발행건수 중 325개의 사업장에서 5,169건(2017년), 6,208건(2018년)이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기록했음.
 - 허위로 기록하고 방조한 부산시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부산시 환경정책과 간담회를 가짐.
 - 간담회에서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에서는 배출업체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 맺어 시행을 맡기는 지금 제도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 제 3자가 측정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전달함.
- 2) 제 2차 모임(7/17)
 - 부산해양수산청 간담회에 제안 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간담회에서 부산항에 설치 예정인 AMP(육상전원공급장치)의 에너지원을 공급 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함. 노후화물차 출입제한에서 5등급 노후화물차 항만출입이 제한하기로 계획되어있는데 세부계획을 질의하기로 함.

- 미세먼지안전학교 기획 : 미세먼지 이론적 강의 위주는 지루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강의 내용 준비 필요. 예를 들면 창문해파필터 설치 방법, 간이 공기청정기 만들기, 실내오염 줄이기 등

3) 제 3차 모임(8/9)

-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미세먼지로 인한 항만근로자, 항만 인근지역 주민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항만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함
- 설명회에서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방안, 항만 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이 진행되었음.
- 설명회에서 질의를 통해 AMP(육상전원공급장치)의 에너지를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제안함. 부산신항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연계해서 공급할 것을 요청함.
- 항만을 출입하는 노후화물차량에 대한 설명은 없어 세부사항을 질의하였음. 해양수산부는 화물차량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의 소관이라고 답변함.
- 국토부에서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국토부와 의 간담회도 계획 해볼 만함.

4) 제 4차 모임(9/18)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북항 재개발건과 부합하여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청장과의 면담 요청은 필요해 보임. 노후화물차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해양수산부에 이야기 했으나 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안전 대시민강좌(안) : 미세먼지에 대해 부산시와 국가정책을 공유할 기회로써 대중적 강좌 진행 기획. 1, 2주차 강의는 숙의과정으로, 3주차는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가로 정책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4주차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9시~12시로 진행할 예정

5) 미라클 부산 대시민 강좌 : 제 5차~ 제 9차(10/10~10/31)

- 10월 10일(목) 오전10시~12시 / 부산일보 대강당 / 120명 참석
: 1강 <미세먼지 바로보기> 국가기후환경회의 서흥원 국장
: 2강 <실내미세먼지줄이기> /천연이끼만들기 사하지킴이 옥현주
- 10월 17일(목) 오전10시~12시 / 부산일보 대강당 / 120명 참석
: 1강 <미세먼지와 건강> 부산연구원 허종배 박사
: 2강 <미세먼지토크콘서트> 부산연구원 허종배 박사, 동아대학교환경보건센터 홍영습 교수, 이희자 동구 구의원
- 10월 24일(목) 오전10시~12시 / 부산일보 대강당 / 60명 참석
: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 : 부산시 기후대기과 김미향 과장
: 시민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감축 실천방안
: 실천방안 조별 발표
: 우선순위 투표 (시민실천방안 투표 / 부산시 정책방안 투표)
: 총평 : 경성대학교 장영환 교수
- 10월 31일(목) 오전 9시~12시 / 부산환경공단,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

3. 정책제안

1)추경예산 등 예산집행에 있어 장기적인 집행 요구됨

- 부산시의 2019년 추가경정 예산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①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정화기·노후송풍기교체 124억원(11→135),

② 수소차 구매보조지원 65.5억원(124→190.5),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원(210→228),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5억원(25→30),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203억원 (120→323)

③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0억원(7.5→27.5)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수소차 및 전기 자동차 구매에 지원하는 것은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시책과 균형있는 정책마련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예를 들어, 수소차 구매는 ‘수소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현재는 부생수소를 개질하는데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임

전기 자동차의 경우도, 원전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또다른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에너지 보급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수소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다는

해수부 및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인 화물자동차의 저감장치 (BPF) 보급 및 지원에 우선 지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② 미세먼지와 공원일몰을 연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조성에 보다 확대 필요.

2)부산시민 체감형 사업 필요

- 부산시는 미세먼지 대 시민홍보에 ‘예산이 없다’고 늘 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시민들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데 예산편성이 요구됨.

=>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직접 내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참여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3) 동남권 대기환경청 부울지부 등 직제 마련 필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설정 및 산업계 1-3종 총량규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됨.

-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축소조작 은폐에 대한 대책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지난 4월21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산업시설 미세먼지 배출량이 축소 조작 은폐되었음

=> 내년 산업시설 미세먼지 배출 총량규제를 앞두고, 산업시설 배출량을 정확히 다시 조사하고 저녹스, 저황 보급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함.

- 통합허가 및 관리로 인한 부산시 및 지자체 권한 및 책무 부재로 현장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동남권 부울경의 특성 (항만 및 하역 배출량 등)이 반영된 ‘대기환경청’ 신설 필요
- => 부울경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한 직제 마련

4) 장기적인 방안 마련 요청

- 공원 일몰제 연계
- 도심숲 가꾸기 사업 확충
- 교통체계 개선